



도, 美 통상정책 대응 나서

한국산 제품 25% 상호 관세 적용 따라

해외시장 다변화 등 지원책 확대 검토

기업 현장 소통으로 실질적 피해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미국이 2일(현지 시각) 발표한 새로운 관세정책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도내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미국의 조치는 오는 4월 9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철강 제품이나 반도체, 배터리, 화학제품 등 특정 예외 품목은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2월 기

준 도내 수출 비중의 19.7%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하고 있어, 이번 통상정책 변화는 지역 수출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왔다. 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과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규제 인증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3월 말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2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찾아가는 관세 상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아울러, 기업 대상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공유하고, 유관기관 및 도내 실·과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미국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다.

“역사의 아픔, 결코 잊혀서는 안돼”

김관영 도지사,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북과 제주, 역사와 아픔을 잇는 연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정부기관, 광역자치단체, 정당, 국회의원, 유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약 7년에 걸쳐 제주도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희생이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번 추념식은 당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국민 통합과 지역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역사는 기억하고,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합시다'면서 '4·3이 보여준 화해와 상생·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다시 대한민국에 널리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고 게재했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전북 지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일부를 진실규명 대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해당 사건에는 종교인 희생과 순창 군정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포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역사의 아픔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되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이 평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거울이자 나침반이다"라며 "전북자치도는 도민과 함께 정의와 인권, 평화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 착수

도, 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 인증 추진

고군산군도 등 포함... 2027년 인증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부안 지역의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나아가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 인증을 추진한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고창 병마위·부안 채석장 등 32개 지질명소를 포함한 1,982.5㎢ 규모로 지정됐다. 올해는 4년 주기의 첫 번째 유네스코 재검증 시기가 도래해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대응이 본격화된다.

전북자치도는 유네스코의 재검증 절차에 따라 2025년 7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유네스코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같은 해 12월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고창·부안군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외국어 안내시설과 탐방로 개선 등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교류 확대 및 신규 탐방 프로그램 발굴에도 힘을 기울인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지난해 전국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탐방로 및 안내시설 정비, 탐방객 편의시설 개선, 국제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유네스코 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이번 재검증을 넘어,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학술적 가치 규명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 이후 본격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 서해안을 세계적인 해안 생태관광지로 도약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현 환경산업국장은 "전북 서해안이 세계적인 해안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증 대응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마스코트 '만금이' 공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희망의 황금색으로 새만금의 긍정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금이'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새만금 국가 산업에 대한 대국민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마스코트 '만금이'를 공개해 국민 지지도를 향상하고 새만금의 긍정적인 변화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새만금청 직원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진 '만금이'는 금빛으로 빛나는 태양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새만금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웃음과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신설 웹툰 '만금상사(가칭)' 직원으로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새만금의 가능성과 숨은 비경을 구석구석 알리는 새만금 홍보 마스코트로 맹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새만금 주요 정책과 새만금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내 중소기업 금융 부담 줄인다 | 도, 6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책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책은 △긴급대환자금 200억원 △거치기간 연장 지원 400억원으로 구성되며, 4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긴급대환자금'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다. 상환기간은 2년이며 2% 이차보전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이 임박한 기업을 대상으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장 기간 동안 2~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단기적인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대환자금 및 거치기간 연장 지원사업 신청은 4월 7일부터 온라인 접수(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스템, <http://jbok.kr>)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